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www.psi.go.kr

2009년 1월

제8호

발행인 김길배 편집인 김인규·유동열 ISSN 1976-6041(On-Line) 전화 (031)285-0183 FAX (031)285-0184

■ 신년인사



권용섭 화백 作

지난 해 저희 치안정책연구소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저희 연구소는 법질서 확립과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치안정책연구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가내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오며,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1월 1일
치안정책연구소장
치안감 김길배 拜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경찰의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연구

최 경 환 선임연구관/교육학 박사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현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의 사회적 가치가 다른 어떤 재화나 용역보다 더 높고, 정보 관련 산업과 활동이 사회의 주축을 이루며, 정보에 대한 수요와 활용도가 매우 높다. 정보는 바로 21세기 국가 경쟁의 원동력이다. 정보화사회는 정치와 경제, 행정,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로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경찰 역시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행정의 정보화는 필수적 사항이 되었다. 경찰행정정보화 요구에 따라 경찰전산망이 확충되었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이버수사 인력의 전문화·고급화와 함께 첨단수사장비 보강을 통해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등 21세기 선진경찰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정보화업무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경찰업무의 과학화를 위해 전자결재, 인사관리, 범죄분석예측시스템, 온나라시스템, e-사람 시스템, 교육통합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표준전자문서시스템 등 경찰 종합정보체제를 운영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지방경찰청도 일선 파출소까지 경찰종합 정보체제를 확대 구축하고, 교육기관의 교육과 함께 외부 위탁 교육확대 등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각 지방청마다 교육인원도 대폭 확대되고,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보안 인프라도 확대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획문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통계표 작성 등 자체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대회를 열고 있다.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찰의 정보화교육 현주소는 아직 조직부서마다 정보화능력 수준의 차이가 있고, 경찰관 개개인의 정보화 수준의 편차도 매우 크다. 경찰의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본 연구는 체계이론을 통해 경찰의 정보화교육을 교육시스템의 의미와 구조, 그리고 기능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정보화교육에 대해 거시적 차원에서 정보화교육의 교육환경을 비롯한 투입과 산출로 구조와 기능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였고, 미시적 차원에서 정보화교육의 교육과정의 부분적 요소, 상호작용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수준, 교육주체로서 교육생과 정보화교육 관리자의 태도 및 전문강사의 교수방법 등 정보화교육의 현황과 교육체계를 분석하고, 교육 효과를 산출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을 위한 교육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진행되는 정보화교육에 대해 역동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체계를 위한 활용방법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체계는 교육환경, 교육주체, 교육과정, 평가관리, 설문관리 등 교육에 대한 투입과 산출, 그리고 활성화된 피드백과정을 거쳐 발전하게 된다. 정보화교육과정에서 교육목적, 교육 동기, 강의실과 교육기자재 등 교육환경, 교육생·강사·교육관리자의 태도, 교육과정과 교재내용의 적절성, 교육내용 이해도, 직무와의 연관성, 만족도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반응이 일어난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정보화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정보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교육과정의 체계화, 사이버정보화교육의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 활용을 통한 정보화교육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현재 정보화교육의 교육내용은 워드프로세스, Windows XP,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정보검색 등 주로 기초과정이나, 앞으로 정보기술전문교육과 정보활용능력면에서 네트워크관리, 정보화활용능력실기, 디지털 이미지편집고급기능, 프리젠테이션프로그램고급, 표계산프로그램고급(실무), 웹디자인, 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 고급, 디지털카메라촬영기법 및 동영상 편집 등 발전된 단계로 심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보안 고급과정, 디지털증거분석프로그램활용과정, 범죄정보시스템 분석과정 등과 같이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한다.

정보화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의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준별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화교육이 단지 의무적인 수료나 인사 운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큰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직무활용적용도가 높으며, 만족도도 높다. 경찰관의 직무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별 정보전문화교육도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생이 아닌 교육기관이 먼저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상 온라인정보화교육도 업무 부담과 집합교육 기회 제한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별 수준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경찰사이버정보화교육’ 사이트를 비롯한 ‘정보화교육포털’, ‘경찰청사이버외국어학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국민정보화교육’,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계교육원’등을 통한 정보화교육도 학습과 직무의 병행을 통한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정보화교육은 교육생과 강사간 또는 교육생간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정보화교육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사이버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생의 적극적인 학습의지와 자세가 없이는 교육 성과를 얻기 힘들다. 교육생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과과정 및 코스웨어의 개발, 경찰 직무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강사진과 전문인력 확보,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이버정보화교육을 정부기관간에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더 활성화되고, 교육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가능하다면 정보화 교육을 보다 빠르게 실시할 수 있다.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해서만이 경찰관의 직무수행 정보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전문화된 정보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앞으로 사이버정보화교육의 장점을 살리고, 집합형태의 강의실 수업교육의 장점을 절충한 이른바 브랜드형 사이버교육을 병행하면, 더 큰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과정의 대부분은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하고, 집합형태의 강의실 교육을 통해 총괄 마무리한다면 사이버정보화교육의 약점을 보완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집합적인 정보화교육과 함께 사이버정보화교육이 정교하게 결합된다면, 정보화교육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차원의 정보화능력으로 향상 발전될 수 있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인 : 김인규 기획운영과장, 유동열 연구관
 편집위원 : 김학신, 김윤영, 조은순, 권태형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285-2616 (경비) 61-5207
- e-mail: webmaster@psi.go.kr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송 경 호 선임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시대적 요청임과 동시에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숙원인 평화적 통일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평화에 관한 인식과 정전협정의 당사자,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사령부 해체, 군사장비 반입금지, 한미합동 군사훈련,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 등에서 대립양상을 보여 왔다. 쌍방은 “평화에 대해 무력충돌과 군사적인 행동이 없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남한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 포기를,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였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평화조약에 가늠하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2007 남북정상 선언이 체결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상호간의 입장과 논쟁의 차이를 조정·타협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시켜 나가는 데 국민적인 결집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상호억지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변 4강의 교차승인으로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평화체제 구축의 필수적 요건으로 사료된다.

평화체제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조약(안전보장조약, 불가침조약, 평화조약 등)과 같은 일련의 명시적 조치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뢰구축의 경로를 거쳐야만 현상유지와 전략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군비통제, 그리고 평화의 명시적 징표로서의 군축 또는 무장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내 무력충돌의 법적 종결, 남북한 간의 화해 공존의 제도

화,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를 포함한 관련 주변 국가들이 평화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주도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면서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관련국의 협조와 보장을 요하는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해결 방식은 분리접근방식과 동시해결방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① 분리접근방식은 남북한이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련국이 이를 추진, 지지, 보장하는 방식으로 2+2(남북한, 미, 중), 2+4(남북한, 미, 중, 러, 일), 2+UN(남북한, UN)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동시해결방식은 남북한과 관련국이 동시에 대등한 당사자로 참여하여 평화체제 전환과 국제적 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3자회담(남북한, 미국), 4자회담(남북한, 미, 중), 6자회담(남북한, 미, 중, 일, 러), 20자회담(1954년 제네바 회담형식 : 남북한, 중, 러, 참전 16개국)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는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전쟁의 직접적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국제적 지지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쟁을 종결하는 방식은 국제법상 평화협정 체결 방식과 전쟁상태 종결선언, 국교수립에 관한 합의방식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결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하고 전쟁상태 종결을 선언함으로써 전쟁종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 ② 민족공동체 헌장 또는 남북연합헌

장을 채택하여 전쟁상태를 종결함과 동시에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③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발효)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 방식은 남북 평화협정 체결방식과 4자 평화협정 체결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남북 평화협정의 체결방식은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지지, 추인, 보장하는 2+2 방식이다. 이 경우 남북 평화협정 외에 미중의 평화보장문서(남북 평화협정과 별도의 문건 채택방식)로 행해질 수도 있고 미·중의 지지, 추인, 보장의 취지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단일문건화할 수도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남북한 특수 관계의 인정·인간존중, 내정불간섭 ② 한국전쟁의 종결 및 평화회복 수립 선언 ③ 남북 쌍방 간의 평화의지 확인, 무력사용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공동 노력 ④ 불행한 과거사 정리와 미래지향적 통일을 위한 공동노력 및 통일의 3대원칙 선언, 전후 청산의 문제에 있어서 포용과 보상의 원칙에 대해 심층검토가 필요함 ⑤ 비무장지대 평화 지대화 및 평화적 이용 추진, ⑥ 남북한 평화관리기구 ⑦ 불가침의무 확인 및 이행 보장, 무력 불사용 및 위협 포기 ⑧ 불가침 경계선의 설정 및 준수 ⑨ 통행·통신·통상 분야의 포괄적 남북 협력의지 원칙천명 ⑩ 우발적 무력충돌의 해결방법과 구체적 시한을 설정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⑪ 남북기본합의서의 즉각적인 이행·실천 및 분야별 남북 공동위원회의 정상화 협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평화보장문서의 부속 의정서는 ① 남북 평화협정 체결지지 ②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공동노력 명시 ③ 한반도 평화 관리기구 구성에 능동적 참여의사의 표명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4자 평화협정 체결방식은 1973년 체결된 베트남에서의 전쟁종료 및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의 선례

를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약이나 협정 그 어느 것도 무방할 것이다.

4자 평화협정의 서명자는 남북한과 미·중의 외무장관으로 하되 서명 후 각국의 대표권을 갖고 있는 국가수반 등의 비준을 받아 발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① 한국전쟁의 법적 정리(전쟁종결 및 평화상태 회복 명시) ② 상호 불가침의무의 협약 ③ 현 군사분계선의 존중 및 군사분계선의 불가침경계선으로 대체 ④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평화적 이용 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준수 및 감시를 위한 평화 관리기구 설치 ⑥ 한반도 군비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에 대한 미·중의 지원의지 표명 등을 포함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를 선행시키고 남북한의 평화 및 협력 증진의 토대 하에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추천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 제7호 당첨자 : 김중현

□ 보내실 곳

- 인터넷: webmaster@psi.go.kr
- 내부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 보내실 내용

- 이름,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응역연구과제 논문요약**

경찰단계에서의 성폭력사건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이 승 준/법학박사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4년 12월 우리 사회는 이른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여중생에 대한 장기·집단적 강간행위라는 점에서 심리적 공포를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인권침해적 수사로 또다시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경찰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내외부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본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의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폭력 범죄의 인권수사라는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피해자보호에 대한 진일보된 모습을 상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 성폭력 사건을 대함에 있어, 수사경찰은 중복조사의 문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면식 대질조사의 문제, 수사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침해 문제 등 여러 課題를 안고 있었다. ‘밀양 여중생 사건’ 이후 경찰청의 인권보호센터의 설치를 비롯한 성폭력 사건 수사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위의 문제점들을 많은 부분 해소하였으며, 각종 시스템과 제도들이 외견적으로는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성폭력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공적 수사기관인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에 있어, 초기에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무관심에 찬 태도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쉽지않다. 성폭력 피해자 1명을 CARE하는 것보다 살인죄의 용의자 1명을 검거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는 극복되어야만 한다. 성폭력피해자가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피해에서 조속히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찰의 임무는 수사활동을 통한 범죄인검거와 기소에만 있는 것이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그를 통한 이전 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데에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찰의 모습이 지나치게 수사편의주의적, 실적지향적 사고에 젖어 왔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적극적 차원과 소극적 차원이 존재하며,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법공체의 기본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그 독자적 의미를 부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고 이해관계인인 피해자의 보호도 간과될 수 없다.

‘밀양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성폭력범죄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은 상당히 정비되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잘 보완한다면 선진국 수준으로 人權附合度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초동 대응절차와 증거수집절차를 개선하고, 사후 CARE조치로서 ONE-STOP 지원센터의 운영개선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해결하여야만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경찰관들의 인식의 전환과 그로 인한 수사절차의 개선은 단순히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만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감정과 수사기관의 수사현실 사이에 가장 괴리가 큰 범죄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관행이 변하고, 친인권적인 수사절차가 자리잡는다면 이는 경찰수사 전반으로 확대되어 경찰수사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1차적 단계를 넘어서 피해자보호와 그를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和解라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찰을 비롯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주변인(Randfigur)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가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刑事節次의 中心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거기에는 경찰이 앞장서야만 한다. [PSI](#)

■ 2008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요약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질서 확립방안

차 성 민/법학박사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1. 국가경쟁력과 공공질서

국가 경쟁력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1980년대 마이클 포터 교수의 경영전략 이론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가들 간에 거시경제 성과들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가 경쟁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일본, 스위스, 홍콩 등에서 자국의 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으며, 국제경영개발원(IMD)나 세계경제포럼(WEF)와 같은 기관들에서 국가간 경쟁력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하는 경쟁력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IMD, WEF 등 기존의 국가경쟁력 개념은 국가의 생산성 내지 국민 소득 증대 능력, 잠재 성장 능력 등으로 정의되어, 경제적 측면의 부가가치 및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경쟁력 강화만으로는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부족하며, 이 둘을 매개하는 그 밖의 사회적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경쟁력이라는 개념은 그 측정의 쉽고 어려움을 떠나서 현재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개념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쟁 우위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지표들을 내용으로 포함하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2. 공공질서 확립의 요건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25일에 제7차 회의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법질서 확립과 경제 성장은 정비례의 관계에 있는데, 낮은 수준의 법질서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잠식한다고 전제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3대 핵심 분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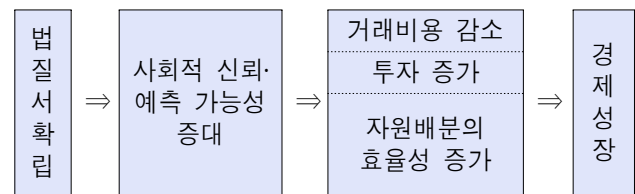
선정하고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중점추진방안]

3대 핵심분야	중점 추진 방안
엄정한 법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지도층 비리 근절 ○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 ○ 선진 노사 문화 정립 등
사회적 약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약자 보호 ○ 범죄 피해자 권익 보장 등
법질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선진화, 법교육 강화 ○ 법질서 운동 전개 등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법질서 확립과 경제성장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매년 연평균 GDP 약 1% 포인트의 추가 경제성장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법질서 확립과 경제성장의 관계 관한 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실물투입의 양적 증가에 의한 성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법질서 준수, 청렴도, 투명성 등 사회제도적 여건의 개선을 통해 향후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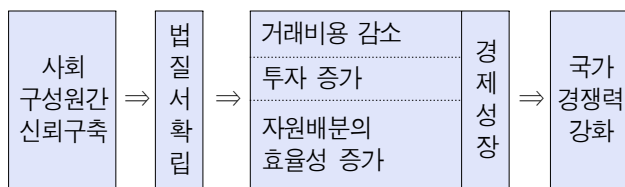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법질서 확립과 경제성장 모델]

그런데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질서 확립이 어렵다. 타인이 질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없는데 나만 질서를 지키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4.3%

가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법대로 살면 손해’ 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법(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집행하기에 앞서서, 정부와 국민, 기업과 국민, 정부와 기업, 국민과 국민 등의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 간에 일단 신뢰가 형성되고 나면, 구성원들간의 최소한의 약속인 법(공공)질서를 지키는 일에 부담감이나 피해 의식을 가지지 않고 준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법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 모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우려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 공공질서 준수 의식의 함양

1) 법문화의 발전을 통한 공공질서 확립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분야의 하나로 ‘법질서 투자’를 선정하고 법질서 투자를 통해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은 넓게는 문화, 좁게는 규범, 더욱 좁게는 법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구성원들 모두가 가질 때에야 비로소 자발적인 공공질서 준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자발적인 의식이 결여되어 질서 유지 상태가 오래가지 못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법의 제·개정과 법집행을 통해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법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 위주의 법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때 피교육자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2) 법문화 확립을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 및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형성되려면 의사소통이 필요하듯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역시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한편 의사소통에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현대에는 인터넷, 방송 등과 같은 미디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본다. 이를 위해 법문화의 확립과 이를 위한 의사소통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4. 결론

공공질서는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하여서 함께 지켜야할 규칙이다. 공공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공공질서의 근본 사상은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배려하는 것이다. 모두가 이타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생활한다면 모두를 위한 사회가 될 것이다. [PSI](#)

■ 2008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요약

선진교통질서 확립방안

명 묘 회/행정학 박사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도로상에서 사람과 화물의 이동과 관련하여 교통 참여자들이 갖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으로 요약되는 교통문화는 교통환경, 교통질서, 교통안전의 측면에서 그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통 안전지표를 통해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교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공급이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팽창한 교통현장에서 이에 대한 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의 전반적인 교통문화수준은 외적인 성장이나 경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OECD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3.2명으로서 OECD 29개 중 27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이 OECD 30개국의 인프라, 이동수단, 비용, 교통안전 등 종합적인 도로교통 부문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9위였다.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준수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인 과 다른 운전자의 위반원인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요인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공식적 제재보다는 비공식적 제재, 처벌회피 경험, 순응의 기회비용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처벌보다는 유인 또는 교육 수단이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문제의 주제는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이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의 우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세계

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보다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즉 교통정책과 단속부분, 교통시설과 운영부분, 대국민 교육 및 홍보부문에서의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인간 중심적 교통시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 보행자, 고령자, 장애인의 특성에 기반한 시설 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 보행자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효과적·능률적 교통정책 및 단속에 있어서는 현행 자동차 중심 체계의 도로교통법령을 교통약자 중심으로의 도로교통법령 개편이 필요하며,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을 통해 위반을 억제하고자 하는 처벌 중심의 전략은 국내·외 연구사례들은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식적 제재보다 비공식적 제재를 활용하는 등 성과지향적 규제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효과적 규제방법 선택에 있어서는 처벌 보다는 유인책을 활용 스스로 지켜질 수 있도록 유인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 보다는 위반으로 인한 피해 등을 알려 교통안전의식의 정립이 필요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단속 및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적 단속방법 및 처벌전략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용자 지향적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운전면허의 연계성 확보, 운전면허 취득단계의 교육 프로그램 개선, 위법운전자에 대한 교육 개선 등이 필요하다. **PSI**

2008년 치안정책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는 2008년 12월 4일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선진사회사회를 향한 법질서 확립』이란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조용관 연구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1부에서 ‘제1주제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질서 확립 방안’(한남대 차성민 교수)과 ‘제2주제 : 선진 교통질서 확립 방안’(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명묘희 박사)가 발표되었다.

2부에서는 육정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상겸 단국대 교수, 노인수 변호사, Gotou Kazuhiro 교수(일본 경찰정책연구센터), 宋利紅 교수(중국인민공안대학 부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선진사회사회를 향한 법질서 확립』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2008년 치안정책연구소 워크숍 실시

2008년 12월 11-12일간 강원 속초 금호리조트에서 치안정책연구소 전직원이 참가한 ‘2008년 정기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08년 수행한 각 연구실별 책임연구과제 및 외부용역·위촉 연구과제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08년 연구방향 및 연구소 활성화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책임연구과제 발표회 개최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11월 동안 4회에 걸쳐 전 연구관이 참석한 가운데 책임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일자	연구과제명	발표자
11. 3	중국 시큐리티산업의 발전과 현안과제	정 용
11.13	성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학신
11.17	이륜자동차의 운전면허제도 개선	권태형
11.24	새로운 유형의 집회시위의 실태 및 경찰의 대처방안	임현규

치안정책연구 제22호 발간, 배포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2008년 12월 1일 연구학술지인 치안정책연구 제22호를 발간하여, 경찰청 등 일선 경찰관서와 경찰관련 대학학과 등에 배포하였다. 수록된 논문은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치안정책연구 제22호 논문 제목	저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정신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교통사고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	정철우
신체도주의 접근을 통한 경찰 신뢰행정의 구현방안 연구	이상수
조선시대 형사판례를 통해 본 재판의 체원칙	김용희
청소년의 유해업소 접촉실태와 경찰의 단속활동 방향	유지웅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른 불법위험과 사이버경제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용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임운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방안 연구	김윤영
독일 개인정보보호국의 임무와 권한	박병욱

◆ 안보대책연구실에서는 12월 15일 ‘제3차 안보정책분석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송경호 연구관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유동열, 김윤영 연구관이 토론하였다. [PSI](#)

치안정책리뷰 과월호 기사 목록

창간준비호 (2007. 12. 1)

구 분	제 목	저 자	소 속
발간사	치안정책리뷰 창간준비호를 발간하며	조용관	치안정책연구소장 (직대)
연구특집	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 발전방안	신양균	전북대 교수
	치안정책동향	손찬호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동향	경찰음부즈만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김태명	전북대 교수
	뉴거버넌스 시대의 경찰발전 패러다임과 신뢰행정 구현방안	이상수	치안정책연구소

제1호 (2008. 1. 2)

구 분	제 목	저 자	소 속
발간축사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의 원년(元年)을 다지며	정봉채	경찰대학장
연구특집	경찰 상훈제도에 관한 연구	황성원	한국행정연구원
	공관중심주의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윤성철	치안정책연구소
	범죄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허경미	계명대 교수
치안정책동향	북한 선군(先軍)노선의 실체와 우리의 대응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소 소개	2007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과제 목록	편집팀	치안정책연구소

제2호 (2008. 3. 3)

구 분	제 목	저 자	소 속
권두칼럼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를 기대하며	이관희	경찰대 교수
치안정책동향	개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경찰수사의 변화 방향	김재민	경찰대 교수
	일본의경찰정책연구센터(警察政策研究センター)소개	권태형	치안정책연구소
연구특집	우리나라 경죄처리절차의 개선방안	손동권	건국대 교수
	경찰의 효과적인 예방정보활동에 관한 연구	최경환	치안정책연구소
	김정일 체제의 위기 실태와 향후 전망	송경호	치안정책연구소
	경찰 무선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활용을 통한 경찰행정 선진화 방안 연구	권태형	치안정책연구소

제3호 (2008. 5. 1)

구 분	제 목	저 자	소 속
치안정책동향	독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이동규	치안정책연구소
	호주의 범죄학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운영현황과 시사점	이상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특집	경찰법집행의 국민수용도 제고방안 연구	이상원	용인대 교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김윤영	치안정책연구소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제도개선방안의 검토	유지웅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소 소개	2006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과제 목록	편집팀	치안정책연구소

특별호 (2008. 6. 27)

구 분	제 목	저 자	소 속
권두언	불법집회시위의 사회적 피해 및 근절대책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특집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김운영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관한 고찰-판례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정초영	경찰대 교수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협력 및 활성화 방안	손찬호	치안정책연구소
	경찰활동과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백창현	치안정책연구소
	금융기관 범죄의 유형분석과 대책: 국제금융범죄를 중심으로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제5호 (2008. 7. 25)

구 분	제 목	저 자	소 속
취임권두언	치안정책연구의 과학화·선진화를 지향하며	김길배	치안정책연구소장
연구특집	경찰 IT조직 및 인력 효율화 방안	허만형	건국대 교수
	지역경찰의 효율적 치안서비스 확보와 민간경비: 용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공권력확립을 위한 주취자(酒醉者) 관리방안 연구	백창현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동향	홍콩경찰청 경찰연구센터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소 소개	2005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과제 목록	편집팀	치안정책연구소

제6호 (2008. 9. 1)

구 분	제 목	저 자	소 속
권두칼럼	어떤 사람이 '경찰관'이 되어야 하는가	이상안	경찰대 교수
연구특집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조은순	치안정책연구소
	경찰관 직무만족도 평가모형의 개선방안	이상수	치안정책연구소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	김상겸	단국대 교수
	환경설계를 통한 방법프로그램(CPTED)의 효과분석 연구	이민식	경기대 교수
치안정책동향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 개관	이기수	서울서부경찰서
	경찰관련 국내 박사학위논문 목록	편집팀	치안정책연구소

제7호 (2008. 11. 3)

구 분	제 목	저 자	소 속
권두칼럼	해외 교류협력의 초석을 놓으며	김길배	치안정책연구소장
연구특집	국민참여재판과 경찰관 법정증언제도	한인섭	서울대 교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연구	백창현	치안정책연구소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과 보호대책 연구	유지용	치안정책연구소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관한 고찰	김운영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동향	북한 경찰(인민보안성)의 조직체제 및 현황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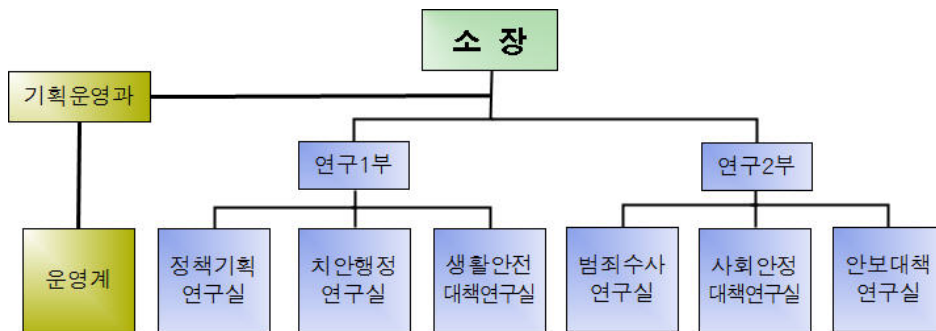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애정어린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PSI](http://psi.go.kr)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서	담당 업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 치안정책개발 및 기획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 및 제도개선 등 치안행정 발전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보수·후생 등 복지관련 사항 연구
치안행정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 경찰 정보통신의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 경찰의 대국민 홍보방안 연구 • 경찰교통업무 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 관련 범죄연구 • 경찰 외근업무,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대책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사회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정보활동 및 국내사회안전대책연구 • 경찰경비활동 및 대테러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치안정책 관련 연구수요 조사◆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위 연구분야와 관련된 연구수요를 연중 접수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치안행정에 관한 이론 정립 및 다양하고 심도있는 치안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를 희망하는 주제를 자유로이 선정, 연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 또는 E-mail(webmaster@psi.go.kr)을 이용하여 치안정책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